

### 전주 하계올림픽 타당성 논란 확산

# 전북자치도 “저비용 전략 의도적 축소·왜곡됐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경제성·현실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일부 보도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전북도는 “저비용 올림픽 전략이 의도적으로 축소·왜곡됐다”며 객관적 검증 과정과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했으며, 지난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진행됐다.

전북도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불확실한 표현을 바로잡기 위해 총 9차례에 걸쳐 50건의 수정 요청을 했지만 상당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심의 단계에서 관련 쟁점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논란은 총사업비 규모다. 전북도가 제시한 약 6조 9천억 원의 사업비는 2000년대 이후 올림픽 평균 비용인 약 16조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쳐 ‘현실성이 떨어지는 저비용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경제성 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용을 낮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총사업비 규모 논란에 “단순한 비교 적절치 않아 시설 경기장 제로 원칙 적용, 리모델링 중심 계획 관계기관 협의 통해 단계적 증액… 현실성 반영” 에너지·사후관리 등 세부 항목서도 반박 나서 “향후 문제부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단순한 총사업비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가별 경제 수준과 예산 체계, 환율, 비교 시점 등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절대적 금액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른 올림픽의 경우 대규모 신설 경기장 건설과 광역 교통망 확충 비용이 포함된 반면, 전주 올림픽은 ‘신설 경기장 제로 원칙’을 적용해 기존 시설 활용과 리모델링 중심으로 계획했다는 점에서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실제로 사업비가 초기 5조 3천억 원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세부 검토를 거치며 6조 9천억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현실성을 반영하는 과정이었다는 설명이다.

세부 항목에서도 논쟁은 이어졌다. 성화봉송 비용이 도쿄올림픽보다 600억 원가량 적고, 에너지 비용이 현저히 낮으며, 사후 유산 비용이 다른 대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러한 비교 역시 단순 수치 나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성화봉송 비용의 경우 파리올림픽, LA올림픽과 비교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에너지 비용 역시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구축 비용을 포함한 반면, 전북은 이미 관련 인프라와 향후 생산 계획이 확보돼 있어 구조적으로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유산(사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과 실제 수치 간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일부 보도에서 LA올림픽 대비 ‘1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약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연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잘못된 수치 적용이 있었음에도 수정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경기장 개보수 비용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전주월드컵경기장과 김제시민운동장 등 일부 시설은 신축에 가까운 수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비용 증가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새만금 수영 경기장의 수질 개선과 기반시설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전체 37개 경기장의 평균 개보수 비율은 43.5% 수준으로, 일부 노후 시설을 제외하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은 올림픽 이후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비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경기장과 관련하여 주차장 등 기반시설 비용은 이미 포함돼 있어 누락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선수촌과 미디어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민간 시설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 전례가 없고

수용 인원 계획이 과밀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과 도쿄·파리올림픽 등에서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됐으며, 국내 국제대회에서도 LH 등이 건설한 공동주택을 활용한 사례가 다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통 문제 역시 쟁점이다. 무주 태권도원의 경우 선수촌에서 이동 시간이 10C 권고 기준인 1시간을 초과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전북도에서도 이 부분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태권도원이 갖는 상징성과 국제대회 개최 경험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협의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속도로 신설이 추진될 경우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제시했다.

전국 51개 경기장을 활용하는 분산 개최 전략을 두고는 교통망 확충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올림픽을 위해 별도의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된 국가 교통망을 활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5’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도 이

어졌다. 응답자의 49.3%가 추가 세금 부담 의사가 없다고 답한 점을 두고 사실상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부정 여론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북도는 이는 정책 찬반이 아닌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실제로 공공사업 조사에서는 비용 부담 의사가 없더라도 사업 자체에는 찬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성 분석 수치(B/C)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전북도는 강하게 반박했다. 일부에서는 기존연도 설정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며, 특정 연도를 적용해야만 경제성이 확보된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연구기관은 “수치 조작성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도는 특히 타당성 평가는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적 필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AHP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B/C 값이 일부 변동되더라도 전체 타당성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비교 기준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향후 문화체육관광부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도·시군 협력으로 도민 체감 행정 실현

### 전북도-시군, 제2회 부단체장회의 복지·민생 등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영성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민생·선거질서 확립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중앙정부의 주요정책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복지·돌봄 정책 이행과 지역 현안 대응 등 시군 협조 사항을 점검하며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수당 확대 시행을 앞두고, 대상 아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인바와 행정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또한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서비스와 관련해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당 인력 배치와 교육, 홍보 등 현장 준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취약계층 지원 사업인 ‘그늘드림’의 차질 없는 추진도 강조했다. ‘그늘드림’은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는 사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도청 영성회의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6년 제2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민생·선거질서 확립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업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복지 대응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천·계곡 등 취약지역의 불법시설 정비와 미조사 구역

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지속적 관리하기로 했다. 불법 지역축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며,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등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도 추진한다. 시군과 선관위,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법 현수막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2026년 1분기 재정집행 소비투자 분야 목표달성,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사항도 논의했다.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안전·하하하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부단체장이 중심이 되어 정책 현안을 꼼꼼히 챙겨달라”면서,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복지 정책과 민생 현안이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도, 지역통합방위회의 개최

### 북한 정세·테러 대응·화랑훈련 등 종합 점검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민·관·군·경·소방이 참여하는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테러 대응체계와 인보태세 점검에 나섰다.

도는 2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2026년 제1차 지역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5사단 전북경찰청, 전북지방방위청 등 유관기관과 시·군 관계자, 국가중요시설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정세 전망 △테

러 상황별 기관 대응 대책 △화랑훈련 추진 방향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생화학·폭발물 등 고도화된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도는 민·관·군·경·소방 간 역할을 재확인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군산시가 기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유공자 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오만호 기자

## 군산전북대병원, ‘개원준비단’ 전환… 2028년 개원 ‘속도’

### 5개 분과위원회·18개 실무 태스크포스(TFT) 중심 준비 작업 진행… 지역 의료 인프라 핵심기대

전북대학교병원 이 군산전북대병원 추진 조직을 ‘개원준비단’으로 전환하며 본격적인 개원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

전북대학교병원은 24일 기존 건립 중심 조직을 운영 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2028년 개원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을 넘어 병원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체계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건립단’은 ‘개원준비단’으로

재편되며 병원 운영, 진료체계 구축, 의료 인력 확보 등 개원에 필요한 핵심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의사결정 구조도 강화해 개원준비위원회를 신설하고,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실무 중심 조직을 확대했다.

현재 개원준비단은 의료인력, 진료체계, 조직·경영, 의료장비·정보화, 임상연구 등 5개 분과위원회와 18개 실무 태스크포스(TFT)를 중심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완성도

있는 개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향후 중증·응급·필수의 중심의 2.5차 의료기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심뇌혈관센터와 소화기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진료를 특화해 지역 내 필수 의료 공백 해소에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새만금 개발과 정부 정책, 기업 투자 확대가 맞물리면서 지역 발전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병원 건립 역시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핵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양종철 병원장은 “개원준비단 전환은 병원 운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전환”이라며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새만금 시대를 선도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전북대병원은 2025년 3월 착공 이후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건립된다. 올해 상반기 지하층 골조 공사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지상층 공사가 이어질 예정이며, 2028년 6월 준공 같은 해 10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 도, ‘로컬창업타운’ 공모 선정… 창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로컬 자원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로컬

창업타운 신규 설치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창업 거점 조성을

통해 로컬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전북은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사업 추진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오만호 기자

## 도, K-컬처 문화올림픽 전략 본격 논의

### 전통문화·K-컬처 결합 글로벌 문화행사 모델 제시

전북특별자치도와 윤준병 국회의원실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컬처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와 K-팝·K-드라마·K-푸드 등 K-컬처의 세계적 영향력을 결합해 새로운 글로벌 문화행사 모델을 모색하고, 전주를 중심으로 연대도시의 문화자산을 연결하는 K-컬처 문화올림픽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그중 문화 분야 논의

를 국회 차원으로 확장하고 정책화하기 위한 첫 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전통과 현대 지역과 지역을 잇는 K-컬처 문화올림픽을 주제로 진행됐다. 발제에서는 오충섭 전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이 전통문화와 글로벌 K-컬처를 결합한 문화올림픽 개최 전략을 제시했으며, 장세길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과 연대도시 간 문화자산을 연계한 협력 모델과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오만호 기자